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공론화

국회 정치개혁특위, 500인 시민참여단과 회의 진행 김진표 의장 "부끄러운 정치... 이번 기회에 바꿔야" 13일에도 공론조사 실시... 비례 의원 선출방식 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위)가 지난 6일 500인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 돌입했다. 국회 정치개혁위는 이날 서울 한강방 송공사(KKBS) 및 4개 지역 총국(대전·대구·광주·부산)에서 모인 시민참여단 500명과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영상으로 환영사를 대신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승자독식 선거제 때문에 여야 정당은 눈앞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국민 전체의 동의를 구하기보다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 편, 내 편 갈라서 사생결단 식으로 싸우는 정치, 자기 편만 뽐낼 뭉치며 하면 이는 수준 낮은 정치가 되풀이된다"며 "이제 부끄러운 정치에서 바꿀 때가 됐다. 정치가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이끌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알마티주 교류의향서 체결식. 지난 4일 지난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왼)와 미랏 일로시조버치 카자흐스탄 알마티 주지사가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개혁위 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를 뛰는 선수가 직접 선거제도를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 시민참여단이 내려준 결론은 정치개혁의 미중심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토론을 했는데 시민참여단의 논의가 결집되면 그걸 합쳐서 저희가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시민당은 이날 회의에서 크게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의제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 의제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신정섭 송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대 총선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새로운 선거제를 우리가 만들어서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그 목적인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하는 데 실패했다"며 "현행법으로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이번에도 다시 쓰면 위상정당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는 한 지역에서 특정한 정당이 의석 독점하는 생태를 허용하고 있다"며 "특정정당의 의석 독점 행위를 막는다면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시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 "1등 성공 경험 자신감 갖자"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도 총력 대응도 강조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 대응하고 도정 사회안전망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5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자원위원회와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특별한 전북사태를 여는 새로운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며,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지사는 "민선 8기 첫 번째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북이

전국 1위를 했다. 함께 도전하면 성취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1위보다 더 담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평가를 위해 노력해 준 모든 공무원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청원들을 격려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아젠다를 하나하나 점검했다. 수도권의 전세사기 피해 확산 상황을 직시하며 우리 도 역시 전세사기 피해 상황을 재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예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의료현장의 고조되는 긴장감을 우려

하며, 도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비상진료기관 운영 등 긴급의료체계 대응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환경단속 사전예고제와 같은 기업 친화정책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1기업-1공무원에 참여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과 소통하고 기업방문을 적극 강화해 줄 것을 독려했다. 끝으로 5월이 중앙부처 예산활동에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각 실국이 전방위적으로 중앙부처 예산활동, 특별자치도립 특례 민영활동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오늘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조례 시행

임승식 도의원 대표발의... 정읍·남원 등에 추진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조례가 제정돼 8일부터 시행된다. 전라북도회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정읍)이 발의한 전라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14일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9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 2021년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1.2%로 조리원 이용은 산모 대부분이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하고 있지만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높은 비용과 감염 등 안전 문제로 인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도내에는 전주, 군산, 익산 이외 지역은 산후조리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나서고 있어 시군별 출산 및 양육 기반 시설의 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임승식 의원은 "도내 출산 취약지역에 전북도와 시군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직접 설립해 출생민들은 차별 없이 산후조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임승식 의원은 "출산율 저하 문제는 열악한 의료서비스의 영향도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은 출산 친화인프라는 출산·산후조리 취약지역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훈 기자

검찰, "김남국 60억 가상화폐 의혹 수사 중"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 받아 위법 행위 유무가 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시세 60억 가량이던 위믹스 코인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25일 이전 전부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보호 종료 자립준비청년 지자체 등 차원 관심 절실'

서남이 도의원 주최 자립지원 조례 공청회 지속 사후관리 방안 필요성에 '공감대'

도내 아동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기관 간 협력과 일원화가 중요하며 보호종료 아동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자립준비청년 대학생 A씨는 "해비 자립준비 청년에게 금융분야 등의 교육이 선택적으로 필요하며, 보육원 등 시설종사자 등으로부터 자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립준비 과정을 경험한 대학생 B씨는 "조례 제정으로 많은 자립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과거 사고 사례를 인용하며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한번 더 강조했다. 익산 시은유아원의 고경숙 원장은 대학 입학금 지원액의 현실화를 주장하면서 "타지에 취업한 청년들이 심리적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2인 거주시설 등 다양한 주거정책을 주문했다. 공청회를 주관한 서남이 의원은 "보호종료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옆에서 손 잡아줄 어른이다"라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립준비 청년들의 진정한 자립과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도의회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이달 15일부터 열리는 제40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도의회, 입법·법률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 국순화·최낙준·김진미 두세훈 변호사 등 4명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는 지난 4일 입법·법률고문 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입법고문 국순화 변호사(사법시험 제52회)와 법률고문 최낙준 변호사(사법시험 제39회), 김진미 변호사(사법시험 제48회), 두세훈 변호사(변호사시험 제5회)이다. 국 변호사는 전북도 인권위원회 위원, 최 변호사는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 김 변호사는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두 변호사는 전주지방감찰청 국민소통 읍부조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의화관련 입법·법률사안 및 정책에 관한 자문 △의화관련 정책사건의 소송수행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법률적 자문을 하게 된다. 국주영은 의장은 "최근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도민들의 행정 수요와 이에 따른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어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법률 지식을 활용해 자치입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라북도의회는 총 8명의 입법·법률고문(입법고문 2명, 법률고문 6명)을 위촉·운영하며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일상 회복의 '지름길'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 공모전 시행 효과·신뢰도 제고

염영선 도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예정

전북도의 공모전 시행 효과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은 오는 15일 개최하는 제40회 임시회에서 도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라북도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염 의원은 "전라북도에서 시행되는 공모전의 경우 시행을 위한 계획, 공고·응모 심사절차 및 수상작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공모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은 공모전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공고·응모에 대한 방법 및 절차,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심사 및 수상작 선정에 대한 절차, 운영·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부서 및 관계기관의 역할과 협업을 강조하고 있어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공모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공모전의 신뢰 제고와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창의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 다양한 목소리가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및 사업에 반영되어 한 단계 성숙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인구감소 위기 대응·성과 확산 도모를"

김성수 도의원, '전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조례안' 발의키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효율적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효과적 성과확산을 위해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전라북도에서 추진되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 사업 및 추진체계가 매우 미흡해 지역의 존재가 달린 일에 무사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의하는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계·협력 방안에 대응해 우수사례 발굴·확산,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인구감소지역 대응 원칙 등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효과적 성과확산을 위한 효시(嚆矢)의 성격을 갖는다. /김재훈 기자